

# 민주, 李 파기환송심 앞두고 ‘재판연기’ 고강도 압박

“대법원, 대선 불개입 의사 밝혀야” 청문회·탄핵 등 대응 수단 총동원 당선시 재판 정치 등 법안도 받의 李 “반드시 살아 새 나라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재판 기일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 밤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탄핵·청문회·입법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 개입과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대법원이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재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버리고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간다”며 “법이 공정한 것 못지않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윤 본부장은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며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중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을 찾아 즉흥 연설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방안은 물론,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특검) 도입·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의 대책을 거론하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모든 대응 수단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고 집행자’라고 규정하며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인 정정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별도로 심리할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재판소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후보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난 2일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 동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중단된다.

민주당은 7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본회의 처리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해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범죄 벌금형의 당선 무효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나 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형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케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명백할 경우 현재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12월 3일 내란을 이겨냈고, 계속되는 2차 3차 내란 시도도 우리 국민의 위대한 손길로 진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정도는 가뿐하지 않나”라며 “반드시 이겨서 국민들이 존중받는 나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고법, 李 파기환송심 15일 기일 정해 소환장 발송

대선 전 판결 확정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일인 다음달 3일 전에 선고할지가 관건인데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파기환송심이 끝나더라도 재상고하면 대선 전까지 판결 확정은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많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한다. 필요에 따라 추가 증거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통상 다른 재판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않는다.

공판기일을 한 차례만 열고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

변수는 절차 진행의 전제인 피고인 소환장 송달이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이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 광주지방변호사회 “파기환송, 사법 절차 원칙 무너뜨려”

광주·전남지역 변호사들이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가 스스로 세우는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사법의 정당성은 단지 결론에 있지 않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했는지에 달려 있다”며 “이번 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공판기일 지정과 함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도 기일지정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소환장은 피고인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긴다.

소환장 송달이 이뤄지고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차회 기일을 다시 정해 소환장을 송달해야 한다. 다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재판부가 송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첫 공판을 일주일 뒤인 오는 22일로 미루더라도 6월3일 대선 전에 변론 종결과 선고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끝나도 재상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고 이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어 대선 전 재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연합뉴스**

법원 판결은 충분한 심리 없이 기존의 절차를 무시한 채 성급히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사법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절차가 이뤄져야 정치 개입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 김문수 “당이 강제로 끌어내리려 해… 일정 중단”

국힘 ‘후보 단일화’ 놓고 갈등 격화 김 “전국위·전대 소집 이유 밝혀야” 권영세 “오늘 당원 찬반 조사 실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 후보는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6일 경주 방문 일정 도중 기자들에게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당이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다. 그래서 저는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로 올라가서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은 단일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당직자 임명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봉축법요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후보가 주도해야 할 단일화 추진 기구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통보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전당대회는 5일 전에 소집해야 한다. 전당대회 소집을 안 해 두면 단일화를 해놓고도 우리 당 후보가 안 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며 “이 사태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해서 5일 전인 어제 전당대회 소집을 비대위에서 의결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전국위는 전당대회를 못 열 경우 대체할 수 있다. 만에 하나 혹

시나 해서 잡아둔 것”이라며 “전국위는 3일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어제 의결했으니 8일부터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와 당 지도부는 “당무우선권”을 두고도 충돌했다.

김문수 캠프는 지난 5일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은 이날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시작하겠다”며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김 후보를 압박했다. **서울·김선욱 기자**